

선거명	제21대 대통령선거				
후보자명	이준석	기 호	4	소속정당명	개혁신당
공약순위 : 1	제 목 :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			*분 야	행정
<p>○ 목 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부처 간 소관 분야 중복과 행정의 칸막이 문제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정부 운영 ◦ 실무 중심의 작은 정부 기조 확립 및 부처 이름이 아닌 실제 업무 성과와 전문성을 중시하는 문화 정착 <p>○ 이행방법</p> <p>① 부처 개편 및 축소 (19부처 → 13부처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유사·중복 업무 부처 통폐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 (교육과학부) · 통일부 폐지 및 외교부로 업무 통합 (외교통일부) · 여성가족부 폐지 및 관련 업무 복지부와 내무부(행정안전부)로 이관 · 보건부를 별도 분리 신설하여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 강화 · 국가보훈부를 복지부로 개편하여 복지정책과 통합 운영 · 산업자원통상부와 중소기업벤처부 통합하여 산업에너지부로 일원화 · 국토교통부, 환경부, 해양수산부의 해양 업무를 건설교통부로 통합하고, 수산 분야는 일차산업부로 통합 · 문화체육관광부, 기획재정부, 행정안전부를 각각 문화부, 재정경제부, 내무부로 명칭 변경 <p>② 3부총리제 도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안보부총리, 전략부총리, 사회부총리를 각각 임명하여 책임운영체제 구축 ◦ 대통령 산하 국가안보실 폐지, 안보부총리가 해당 기능 수행 <p>③ 예산 편성 기능 이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기획 기능을 분리하여 국무총리실 산하 '예산기획실' 신설 ◦ 각 부처 예산 총액 배정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특정 부처의 예산 독점 방지 <p>④ 정부기구 효율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폐지 ◦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통합하여 기능적 효율성 극대화 					

○ 이행기간

- 부처 개편 계획 수립 및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: 취임 후 6개월 내
- 국회 법령 개정 및 예산 심의 통과: 취임 후 1년 이내
- 통합·신설 부처 운영 및 정착: 취임 후 2년 이내 완료

○ 재원조달방안 등

- 부처 및 위원회 통합을 통한 중복 예산 절감
- 행정 운영 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약 및 부처 간 예산 배정 투명성 강화로 추가 재정 투입 최소화
- 축소된 조직 운영을 통해 절감된 인건비와 운영비를 개편 비용으로 활용, 추가 예산 편성 최소화

선거명	제21대 대통령선거				
후보자명	이준석	기 호	4	소속정당명	개혁신당
공약순위 : 2	제 목 : 중국 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 한민국으로			*분 야	산업자원

○ 목 표

-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의 국내 주요 산업단지 리쇼어링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러스트벨트 해소
- 해외 현지 노동조건을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적용 및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국내 복귀 유인 극대화

○ 이행방법

① 리쇼어링 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 규제완화

- 대상: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한 국내 기업이 울산미포, 여수, 반월-시화, 온산, 창원, 구미 등 주요 국가산단으로 복귀할 경우
-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기간 설정: 최대 10년

② 외국인 노동자 전용 특수 비자 신설

- 산단 특수 비자(E-9-11)를 신설하여 기업이 원소재지 국가에서 직접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 절차 간소화
- 특수 비자 쿼터 운영을 통해 기업별 신속한 인력 충원 지원

③ 외국인 노동자 정착 지원 강화

- 언어 및 문화적응 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생활 적응 지원 및 산업 현장의 생산성 제고

○ 이행기간

- 정책 세부 시행방안 마련 및 법령 개정안 준비: 취임 후 3개월 내
-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정비 완료: 취임 후 6개월 이내
- 특수 비자 발급 및 기업 리쇼어링 지원제도 본격 운영: 취임 후 1년 이내

○ 재원조달방안 등

- 산업단지 복귀 기업 증가에 따른 고용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장기적인 세수 확보 가능
- 단기적으로는 기존 산업단지 지원 및 외국인 노동자 관련 교육 프로그램 예산 재편성을 통해 충당, 추가 재정 부담 최소화

선거명	제21대 대통령선거				
후보자명	이준석	기 호	4	소속정당명	개혁신당
공약순위 : 3	제 목 : 지자체,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!			*분 야	조세 지방자치

○ 목 표

-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자체간 경쟁을 촉진
- 지역 간 재정 자립도 제고 및 실질적인 지방 분권 강화

○ 이행방법

① 법인세 국세분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

- 현행 법인세 국세분의 30%를 감면하고, 감면된 금액 전액을 지방세로 전환
- 지방세로 전환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각 지자체가 탄력세율(최대 50%) 적용 가능

② 지자체별 법인세 경쟁 체계 구축

-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 및 운용
-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세율을 변경할 경우 2년 후부터 적용하는 시행예고제 도입

③ 지방소비세 이전 효과 극대화

- 법인세 감면 경쟁을 통해 기업 본사 이전 시, 지방소비세(부가가치세의 일부) 이전 효과를 통한 추가적인 지방 재정 확보 가능
- 필요시 지방소비세 비율 추가 상향 조정으로 지방재정 안정성 보완

○ 이행기간

- 법인세 지방 전환 및 관련 법령 개정안 준비: 취임 후 6개월 이내
- 국회 심의 및 법안 통과: 취임 후 1년 이내
- 법인세 지방자치 분권 제도 전면 시행: 취임 후 2년 이내

○ 재원조달방안 등

- 중앙정부의 의무적 지방교부금 조정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여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 운영 가능

선거명	제21대 대통령선거				
후보자명	이준석	기 호	4	소속정당명	개혁신당
공약순위 : 4	제 목 :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 자체에 위임			*분 야	경제 지방자치
<p>○ 목 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역 간 생활비 및 인건비 격차를 고려한 최저임금제도 개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역 상황에 맞는 노동정책 구현 <p>○ 이행방법</p> <p>① 최저임금 결정 권한의 지방 이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중앙정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기본 최저임금을 결정한 후,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% 범위 내에서 가감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 <p>② 지역 실정 반영한 최저임금제도 운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방자치단체별 주거비, 생활비, 기업의 인건비 부담 수준 등 지역별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여 광역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최저임금 결정 <p>③ 적용 기준 명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여러 지역에 사업장을 둔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실질적 근무지를 기준으로 지역별 최저임금 적용 지역 간 최저임금 적용이 모호한 경우, 해당 유형은 중앙정부가 결정한 기본 최저임금 적용 <p>○ 이행기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방 최저임금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안 마련: 취임 후 6개월 이내 법령 개정 및 지방 최저임금제도 운영 준비 완료: 취임 후 1년 이내 지방자치단체별 최저임금제 본격 시행: 취임 후 2년 이내 <p>○ 재원조달방안 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기존 최저임금 운영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 가능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방 재정 강화 예상 					

선거명	제21대 대통령선거				
후보자명	이준석	기 호	4	소속정당명	개혁신당
공약순위 : 5	제 목 : 국민연금, 신-구 연금 분리가 유일한 해결책			*분 야	사회복지

○ 목 표

-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연금체계 구축 및 세대 간 형평성 확보
- '넌 만큼은 반드시 받는' 공정하고 안정적인 연금제도 확립

○ 이행방법

① 신-구 연금 재정 분리

- 개혁 시점 이후 납입되는 보험료를 신연금 계정으로 별도 관리하여 구연금과 완전 재정 분리

② 구연금 미적립부채 관리 방안 시행

- 인구 구조 및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조기 시행
- 국고 조기 투입을 통해 미적립 부채 증가 억제
- 과지급 문제(연기제도, 반납·추납 등) 개선을 통해 지출 효율화

③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 도입

- 납입 보험료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확정기여형 방식 도입
- 기대 수익비를 1로 조정하여 '넌 만큼 받는' 구조로 항구적인 연금 안정성 확보

○ 이행기간

- 연금 구조개혁 법령 개정안 준비: 취임 후 6개월 내
- 법령 개정 및 연금 분리 체제 구축 완료: 취임 후 1년 이내
- 신-구 연금제도 완전 시행 및 정착: 취임 후 2년 이내

○ 재원조달방안 등

- 구연금 재정의 국고 투입 조기 실시와 함께 자동조정장치를 통해 연금지급 증가 속도를 억제함으로써 국고투입 규모 최소화
- 신연금은 개인 납입 보험료 기반으로 운영되어 추가 재정 투입이 불필요하여 재정 건전성 유지 가능

선거명	제21대 대통령선거				
후보자명	이준석	기 호	4	소속정당명	개혁신당
공약순위 : 6	제 목 :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 도 도입			*분 야	교육

○ 목 표

-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과 허위신고로부터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
- 교실 내 수업 방해와 문제행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마련으로 수업권과 학습권 보장

○ 이행방법

- ①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및 전담 변호사 배치
 -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대리
 - 시도교육청에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여 수사·재판 전 과정 지원
- ② 교사에 대한 허위신고 무고 처벌 강화
 - 허위 아동학대 신고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부과
- ③ 학습지도실 및 학생생활지원관 제도 도입
 - 학교당 학습지도실 1곳 이상 의무 설치
 - 학생생활지원관을 배치하여 문제행동 학생 지도 및 상담 연계
- ④ 단계적 분리조치 및 사후 적응 프로그램 운영
 -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발생 시 긴급성에 따른 분리조치 시행
 - 상담·생활지도 중심의 재적응 프로그램 제공

○ 이행기간

- 관련 법령 및 시행령 개정안 마련: 취임 후 3개월 이내
- 전담 변호사 및 생활지원관 인력 배치 계획 수립: 취임 후 6개월 이내
- 제도 시행 및 전면 적용: 취임 후 1년 이내

○ 채용조달방안 등

- 기존 교육청 예산 내 전담 변호사 및 생활지원관 인건비 항목 재편성
- 학습지도실 설치 예산은 교육부 학교환경개선 예산 내 우선 배정
- 허위신고 감소 및 학급붕괴 예방을 통한 행정·수업 손실 비용 절감 효과 기대

선거명	제21대 대통령선거				
후보자명	이준석	기 호	4	소속정당명	개혁신당
공약순위 : 7	제 목 : 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의 도전 응원!			*분 야	사회적 경제
<p>○ 목 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자산 형성과 사회 진출의 시기에 있는 청년에게 초기 자금 지원을 통해 실질적 기회의 평등 실현 · 보호종료아동, 고졸청년, 대학중퇴자 등 제도 사각지대 청년에게 균등한 출발 기반 제공 <p>○ 이행방법</p> <p>① 정책금융상품 ‘든든출발자금’ 출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청년기본법상 청년(만 19~34세)을 대상으로 하는 용도 제한 없는 대출 상품 제공 · 1분기당 500만원, 최대 5,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.7% 고정금리로 대출 가능 <p>② 상환 방식의 유연성 보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일반상환: 5년 거치, 10년 분할상환 · 취업후상환: 일정 소득 발생 시점부터 상환 개시 <p>③ 기존 학자금대출과의 선택 및 전환 가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청년은 학자금대출과 든든출발자금 중 선택 가능하며, 상호 전환 허용 · 전환 시 기존 대출 잔액을 제외한 차액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 허용 <p>④ 용도 제한 및 사후 관리 체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도박, 성매매 등 불법적 용도에 대한 네거티브 방식 제한 · 지출 증빙 미제출 시 추가 대출 제한 등의 관리 장치 도입 <p>○ 이행기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정책 설계 및 시스템 구축: 취임 후 6개월 이내 · 한국장학재단 등 기존 기관과 협업하여 상품 출시: 취임 후 1년 이내 <p>○ 재원조달방안 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연간 74조 원 규모의 청년 정책 예산과 연 2조 원 규모의 학자금대출 예산을 통합적으로 재편성하여 재원을 마련 · 실효성 낮은 기존 청년 사업 및 대출 체계 정비를 통해 예산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고, 별도의 추가 재정 부담 없이 추진 가능 · 상환이 전제된 대출 구조로 국가재정에 미치는 순손실 부담도 최소화됨 					

선거명	제21대 대통령선거				
후보자명	이준석	기 호	4	소속정당명	개혁신당
공약순위 : 8	제 목 : 현역대상자 가운데 장교 선발한다			*분 야	국방

○ 목 표

- 병사 중심의 장교·부사관 선발 구조를 통해 인력 기반 확대 및 복무 유인 강화
- 군 복무와 학업 연계를 보장하여 효율적인 군 인력 운영과 청년 지원 동시 달성

○ 이행방법

① 병사·부사관·장교 기초군사훈련 통합

- 병역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 실시
- 훈련 성과와 체력·인성·면접 평가를 바탕으로 우수자를 장교 및 부사관 후보로 선발

② 단기복무 간부 선발제도 도입 및 교육과정 운영

- 장교(상위 10%), 부사관(상위 10~25%)로 선발하여 각 4개월(2개월×2회)의 간부 교육 실시
- 임관 후 1년 7개월 복무(총 2년)하며, 복무 종료 시점에 맞춰 학업 복귀 가능
- 필요시 최대 6개월 범위 내 복무 연장 허용

③ 복무 연계 등록금 지원 제도 도입

- 단기복무 간부로 성실히 복무한 경우,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대학 또는 대학원 등록금 전액 지원(국공립 상한 기준)
- 중도 포기 시 지원금 회수 조치 적용

④ 복무 유예제 도입

- 대학 재학생이 기초군사교육을 수료한 후 최대 3년간 복무 유예 가능
- 학기 종료 후나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입대 시기 조정 가능

○ 이행기간

- 군 인사법 등 관련 제도 정비: 취임 후 6개월 이내
- 시범사업 및 교육인프라 확보: 취임 후 1년 이내
- 전면 시행: 취임 후 2년 이내

○ 채용조달방안 등

- 기존 장교·부사관 선발비용과 병력운영 예산 내에서 재배치 가능
- 등록금 지원은 국공립대 기준 상한선 설정을 통해 예산 안정성 확보
- ROTC 정원 미달 및 단기간부 기피로 발생하는 간접비용 감소로 인한 예산 절감 기대

선거명	제21대 대통령선거				
후보자명	이준석	기 호	4	소속정당명	개혁신당
공약순위 : 9	제 목 : 압도적 규제 혁파 위한 '규제 기준국가제' 실시			*분 야	산업자원 규제혁파
<p>○ 목 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글로벌 선도국가의 규제 수준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신 ◦ 창업과 신산업의 개척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,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기업환경 조성 <p>○ 이행방법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규제기준국가제 도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신청자가 기준국가의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, 해당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 신설 ◦ 기존 규제샌드박스제도의 실증특례·임시허가의 한계를 보완한 제도로 설계 ② 규제심판원 설치 및 절차 통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국무총리 산하 '규제심판원' 신설하여 신청부터 특례 부여까지 원스톱 처리 ◦ 분야별 분산된 신청 창구를 통합하여 규제 대응 일원화 ③ 특례 기간 확대 및 안정성 확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기존 샌드박스의 짧은 특례기간(최대 4년) 한계를 극복하여 최대 10년간 특례 허용 ◦ 인명피해 등 발생 시 즉시 중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 병행 ④ 사업자단체 중심의 집단 신청 허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개별 기업뿐 아니라 관련 협회·단체가 규제기준국가제 신청 가능 ◦ 단체 가입만으로도 개별 기업이 특례 혜택 향유 가능하도록 설계 ⑤ 분야별 규제기준국가 설정 및 법령 개정 로드맵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클라우드, 핀테크, 자율주행차 등 분야별로 기준국가(예: 미국, 영국, 독일) 설정 ◦ 향후 5년간 분야별 법령 정비 로드맵 수립 및 단계적 개혁 추진 <p>○ 이행기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규제기준국가제 법제화 및 규제심판원 설치: 취임 후 6개월 이내 ◦ 분야별 기준국가 선정 및 시범사업 운영: 취임 후 1년 이내 ◦ 5개년 규제 정비 로드맵 본격 추진: 취임 후 2년 이내 <p>○ 재원조달방안 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기존 규제샌드박스 운영예산 및 부처별 규제개선 예산 통합 활용 ◦ 민간 투자 활성화 및 사업허가 절차 간소화에 따른 경제적 유인 증대 효과로 자생적 재정효과 기대 ◦ 중복 행정절차 축소를 통해 정부 규제 관리 비용 절감 					

선거명	제21대 대통령선거				
후보자명	이준석	기 호	4	소속정당명	개혁신당
공약순위 : 10	제 목 : '과학기술 성과연금' 및 '과학자 패스트트랙' 등 「국가 과학영웅 우대제도」 도입			*분 야	과학기술 연구환경

○ 목 표

- 우수 과학기술인을 국가 차원에서 예우함으로써 연구자 자부심 회복 및 인재 유출 방지
- 연구성과에 기반한 명예 보상과 편의 지원을 통해 연구 몰입 환경 조성

○ 이행방법

① (과학기술)연구자 연금 제도 도입

-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과학기술인에게 포상금과 함께 매월 연금 지급
- 주요 수상자(노벨상, 필즈상, 과학기술훈장 등) 및 고성과 논문 게재자(Impact Factor 기반 등급) 대상
- 성과 누적에 따라 최대 월 500만 원 한도까지 지급하며, 성과 등급별 차등 지급
- 국가연구자연금 기준심의위원회를 통해 분야별 기준 설정 및 심사 운영

② 과학기술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

- SCI급 Q1 저널 게재, 국제학술대회 발표, 국가공공기관 파견, 기술 발표 등 일정 기준 충족 시
- 출입국 심사 시 외교관 수준의 패스트트랙 혜택 제공
- 연구자의 국제 활동 지원 및 과학기술자에 대한 대우 개선 목적

○ 이행기간

- 연금제도 기준 및 평가체계 설계: 취임 후 6개월 이내
- 법령 정비 및 관련 기관 협의 완료: 취임 후 1년 이내
- 제도 시행 및 첫 수급자 선정: 취임 후 2년 이내

○ 재원조달방안 등

- 기존 과학기술부 연구포상 예산,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비, 우수성과 지원사업 예산 통합 조정
- 연구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일정 수준의 성과만을 대상으로 하여 예산 절감
- 패스트트랙 제도는 행정 지원 성격으로 별도 예산 부담 최소화